

與 “검찰식 불법 캐비닛 정치”...김승원 논란에 ‘韓 때리기’

더불어민주당은 8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 공세를 이어가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한 역공을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애초 한 의원의 의혹 제기에 담당 대변인만 대응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웠으나 연일 공개되는 녹취록의 자극적인 발언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모습 보이자 전면적인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감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의원이 공개하는 녹취록 출처에 법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한 의원의 공세 방식이 과거 정치 검찰의 잘못된 행태와 유사하다는 점을 부각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김민석대표는당 공식유튜브 '민주당TV'에나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관심을 끌려다가 자기 발등을 찌는 철없는 ‘관중’(관심중자)”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한 의원은 의혹을 계속 부풀리기 위해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부터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면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입수 경로조차 밝히지 못하는 자료와 일부 잘라낸 녹취를 동원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자료만 꺼내 악용하는 전형적인 정치, 검찰식 캐비닛 정치”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한 의원이 공개한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씨 간 통화 녹취를 “악마의 편집”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가 녹취에서 임상시험이 승인되면 수천억원을 벌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수천억을 벌 수 있는 사업이고, 무턱대고 부탁을 다 들어줄 수 없다”는 맥락의 대화라며 “수천억원을 벌 수 있다는 발언만 따

서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이 공개한) 서울서부지검이 작성한 기소 계획 문건은 검찰의 내부 자료고, 서부지검 캐비닛에 고이 모셔져 있는 자료”라며 “100% 불법 자료”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한 의원 가족이 과거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른바 당계 의혹과 한 후보의 김 후보자 의혹 제기가 연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의원이 국민의힘 내부 배신자가 되

기보다 대정부 투쟁을 격렬히 해서 탄압받는 희생양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명 당 지도부까지 나서 한 의원에 대한 공격에 가세하는 것은 한 의원의 녹취록에서 여권 인사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하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이 이를 ‘민주당 오빠 게이트’라고까지 주장하는 상황에서 의혹이 낙마론으로 변질 경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치명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특혜론 및 당 사당화 논란 등에 휩싸인 옹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김 대표와 한 원내대표가 이날 옹 후보자에 대해서 공개 발언을 하지 않은 가운데 청와대가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당내

에선 옹 후보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날도 계속됐다.

김남국 의원은 라디오에서 “비례대표 후보자가 장관직을 겸직했던 것은 헌정사에서 찾기 어려운 일인 것 같다”며 “청문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결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옹 후보자가 후보직에서 물러날 것 같은가”를 묻자 “2030들이 왜 이렇게 알뜰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당 청년최고위원인 전용기 최고위원을 거론하며 “용기한테는 반면교사 삼아 절대 닮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성추행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 처분된 장경태 의원에 거명하면서 “내가 당대표 때도 쟁거주고 엄청 이뻐했다”면서 “그런데 완전히 변질되고 기성 정치인이 돼버리고”라고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



이진숙 회피 결의안 의결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국민의힘 이진숙 위원 본인 관련 안전에 대한 발언·표절 회피 촉구 결의안’을 처리한 뒤 회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진숙 의원을 비롯한 과방위원들은 결의안 표결 직전 퇴장했다. /연합뉴스

‘5·18 정신적 피해’ 손배 청구권 소멸시효 폐지된다

이태원특조위 활동 연장법 등도 통과 ‘중수청 필수정보시스템’ 예비비도 의결

앞으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없어진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45건, 대통령령안 23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5·18 관련자들이 실존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청구권 소멸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내년 9월16일까지 1년 연장해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

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프로그램별 광고 편성 시간 총량규제를 폐지하고 30분 이상 프로그램에도 중간 광고를 허용하는 등 방송 광고 규제 완화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다음 달 개청 즉시 수사·행정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수 정보 시스템 구축 예산 41억9천만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출하는 안건, 글로벌 AI 허브 추진위원회 지원단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경비를 각각 6억900만원, 1억4천만원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안건 등도 통과됐다. /연합뉴스

정점식 “개헌 논의 않겠다 사전투표 전면 폐지 검토”

교섭단체 대표연설 “보완수사권 부활”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폐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8일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며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먼저 6·3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부족에서 비롯한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 “방만하고 오만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감시하겠다”며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예정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다”며 “사법 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지고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 무너진 치안부터 바로 세우겠다”며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집권 후 정책은 정반대다. ‘공약사기’”라고 비판하며 전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누렸던 제도의 혜택을 왜 청년세대는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지키겠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폐지해 주택공급부터 확 늘리겠다.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청년·신혼부부의 생애최초 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 주도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대해서는 “최악의 기업 약탈”, “재벌 남치”라고 표현하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낙선시키기 위한 전격전이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건강검진

매일 체크 ✓ 행복 체크

예약 및 문의 062)363-4040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60415-중-211304호

CMYK